

# 4·15 중도 표심에 달렸다

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 목차

4·15 중도 표심에 달렸다 <상> .....	1
4·15 중도 표심에 달렸다 <하> .....	5
outlook .....	7

##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 "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중도 51% "정부가 대응 못한다"**  
**보수 83% "못해" 진보 82% "잘해"**  
**중도 19% "지지 후보 바꿀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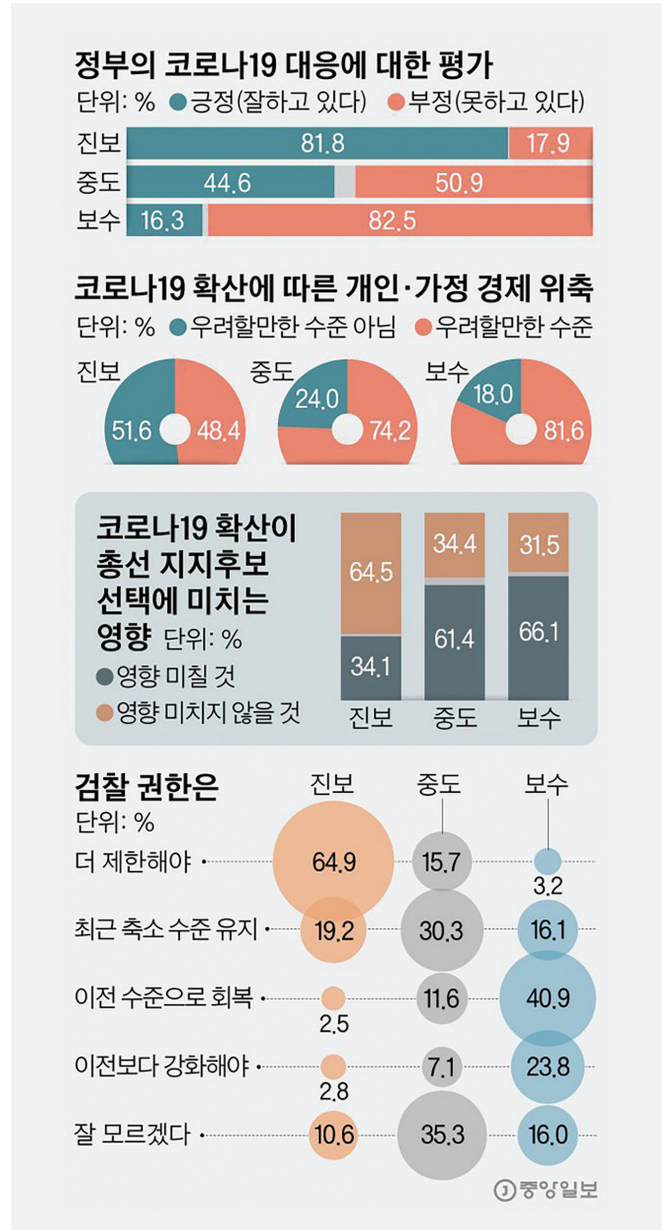
진보·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정부 대응에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진보는 81.8%가 긍정(부정 17.9%), 보수는 82.5%가 부정(긍정 16.3%) 평가를 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가 어떤 가치관과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4·15 총선에선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보는 공동 기획 차원에서 이뤄졌다. 1차는 국민 대상 전화 여론조사, 2차는 한국리서치의 응답자 패널(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웹 서베이 방식(2000명)으로 진행됐다. 진보·중도·보수는 설문에서 밝힌 주관적 성향이 아니라 정책(보유세·남북관계·검찰 권한·부동산 정책·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분류한 '정책 이념'이다.

정책 이념상 중도는 36.5%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5.2%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4·15 총선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61.4%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 전체(54.4%)보다 7%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보수(66.1%)가 진보(34.1%)보다 높게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국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지지 후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중도의 답변 역시 18.9%로 전체(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는 답변은 보수(57.3%)가 진보(41.6%)보다 많았다. 한국리서치 박종선 이사는 "코로나19가 투표 의향과 지지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도 74% "코로나로 가정 경제 위축" 정부 대응 부정평가, 20대가 가장 높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역별 부정 평가는 4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61.7%)에서 가장 높았고, 긍정 평가는 호남(71.4%)이 최고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부정 평가(61.1%)가 가장 높았고, 50대(56.5%)와 60세 이상(53.9%) 순이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달 19~21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8%였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마스크 부족 등의 정책 실패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박종선 이사는 “당시 부정 평가는 31.8%로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1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의 50%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에 부정 평가를 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경제 위축 수준’에 대한 질문에 중도는 10명 중 9명(90.9%)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 위축 수준’으로 구체화한 질문에도 중도의 74.2%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개인과 가정 경제를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진보(우려할 만한 수준 48.4%)보다 비관적인 보수(81.6%)의 패턴과 유사했다. 국가 경제를 우려하는 답변은 진보(83.8%)-중도(90.9%)-보수(96.4%)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정이나 개인 경제의 위축을 우려하는 직업군은 농·임·어업(86.9%), 자영업(77.6%), 판매·영업·서비스업(7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한 업종은 자영업(44.8%)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우려 74.4%)이 경제 위축 우려가 가장 컸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5.8%), 20대(73.0%), 50대(68.7%)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shyun@joongang.co.kr

## 중도층 31% “부동산 보유세 내려야” 24%는 “올려야”

5개 주요 정책에 대한 중도의 입장은 스펙트럼을 이루며 나뉘었다. 한쪽으로 몰리는 진보·보수의 패턴과 대비된다.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테마 중 하나인 검찰 권한에 대한 중도의 입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검찰권 제한 여부는 정치적 성향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인다.

## 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검찰권 제한 “잘 모르겠다” 최다 북한문제 “제재 강화” 가장 많아 최저임금엔 49% “현 수준 유지”

중도는 “잘 모르겠다”(35.3%), “최근 축소 수준 유지”(30.3%), “더 제한”(15.7%), “이전 수준으로 회복”(11.6%) 순의 입장을 보였다. 진보는 “검찰 권한을 더 제한해야 한다”(64.9%)에, 보수는 “이전 수준으로 검찰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40.9%)에 집중됐다.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도 중도는 뚜렷한 입장으로 수렴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 부동산 등의 보유세와 관련해 “잘 모르겠다”(41.3%), “보유세 인하”(31.1%), “보유세 인상”(24.3%)으로 엇갈렸다. 보수는 지금보다 보유세 인하(50.5%), 진보는 인상(48.8%)이 다수였다.

부동산 가격 규제에 대해서도 중도는 “잘 모르겠다”(30.3%)에 이어 규제 강화(20.5%)-완화(19.7%)-현 수준(19.5%)이라는 답변이 나란히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진보는 “부동산 가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67.2%)에, 보수는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52.9%)에 몰렸다.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한 전체 답변은 “부동산 가격 규제를 더 강화하자”(30.2%), “시장에 맡기자”(21.1%) 순이었다. 규제 강화를 요구한 답변은 연령별로 40대(38.0%), 30대(37.3%), 50대(35.5%) 순으로 높았다.

북한 제재에 대해선 중도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33.9%)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제재 강화(32.6%)가 가장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40.4%)가 60세 이상(38.3%)보다 더 많아 보수 성향을 보였다. 보수는 제재 강화(54.7%)에, 진보는 제재 해제·전면 교류(54.8%)에 가장 많이 답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도의 입장이 가장 선명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9.0%)는 답변이 1위였다. 보수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기업에 맡기자”(48.5%), 진보는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48.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shyun@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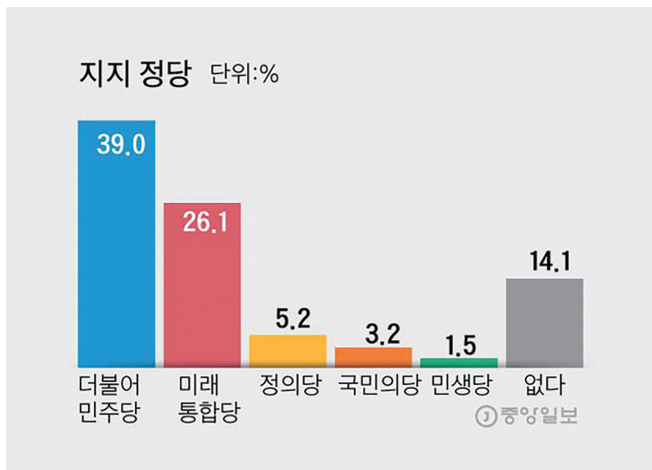
## 중도 “누구 찍을지 못 정했다” 지역구선 45% 비례는 52%

국민 3명 중 1명은 중도였다. 이들 대부분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 어디에 투표할지 정하지 않았다. 설령 정했다더라도 번복할 의향이 제법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그렇다고 정권 견제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었다. 4·15 총선까지 4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중도의 마음이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이때 중도는 스스로 판단하는 이념이 아니라 남북관계·최저임금·부동산 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분류한 ‘정책 이념’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50%**  
**정권 안정론 42%, 견제 41% 팽팽**  
**투표율 변수, 63%만 “반드시 할것”**  
**20대 두명 중 한명 “나는 중도층”**

전화조사에서 정책 이념상 중도는 36.5%를 차지했다. 진보(31.2%)·보수(32.2%)와 3분 구도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태다.

**진보 62% 민주당, 보수 47% 통합당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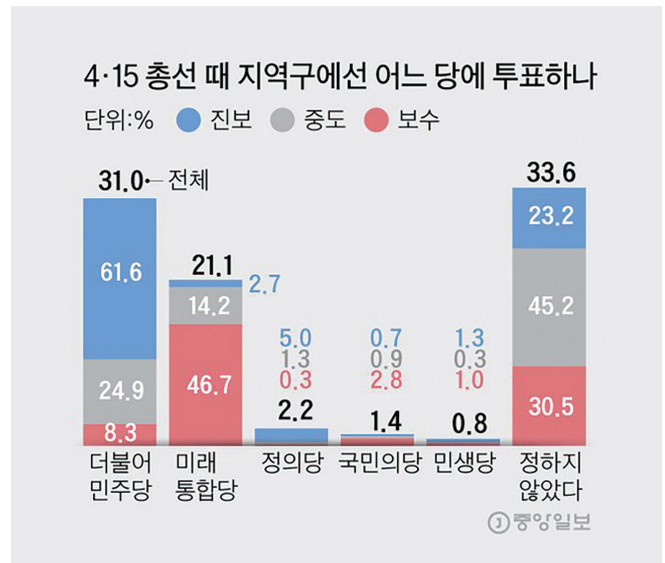
지지 정당.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우선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나 단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가’라고 물었을 때 중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24.9%로 미래통합당(14.2%)을 상회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5.2%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중도에서의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34.9%, 통합당 20%였다. 지지 정당은 있지만 그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압도적 다수의 진보가 민주당(61.6%)에, 절반 가까운 보수가 통합당(46.7%)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의 표심이 40여 일 후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지지를 바꿀 수도 있느냐란 질문에 중도에선 5명 중 한 명(18.7%)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 비율이 진보(9.2%)나 보수(12.3%)에선 절반에 머물렀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지지를 변경하지 않는 ‘극단적 지지층’이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해 온 정당이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일 때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합리적 중도가 결과를 바꾼다”고 설명한다. ‘스윙 보터’(부동층 또는 투표 때 지지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층)인 중도가 총선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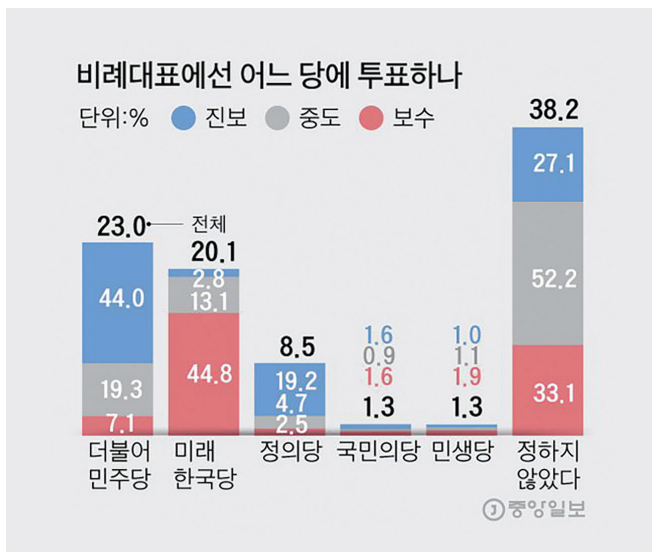


4·15 총선 때 지역구에선 어느 당에 투표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례대표 선거도 유사한 패턴이다. 어디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중도의 절반 이상(52.2%)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다음은 민주당(19.3%)·미래한국당(13.1%)·정의당(4.7%) 순이었다.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엔 보수(44.8%)의 투표 의사가 집중됐지만, 진보에선 민주당(44.0%)과 정의당(19.2%)으로 나뉘는 양상도 보였다. 이른바 진보의 ‘전략적 분할 투표’다.

중도의 흔들리는 마음은 문 대통령과 총선 구도에 대한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중도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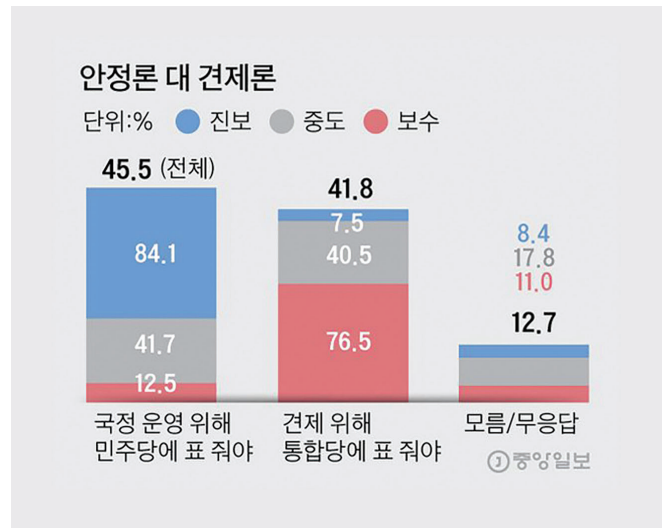
평가(50.2%)가 긍정 평가(42.7%)를 압도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안정론(41.7%)에 공감하는 비율이 근소하게나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인 통합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견제론(40.5%)을 앞섰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도 민주당(39.7%)-통합당(23.7%) 순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강하나 야당으로의 표 이탈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에선 어느 당에 투표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도의 파괴력을 키우는 또 다른 요소는 세대·지역 특징이다. 18~29세의 절반(49.3%)이 중도로 분류됐다. 121석(선거구 확정위안)의 혈전이 벌어지는 수도권에서도 중도 비중이 높았다. 인천·경기에선 40.4%, 서울에선 39.9%였다. 중도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수도권 판세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적으로 민주당(11.3%)-통합당(10.4%)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낮으면서도 안정론(33.8%)보다 견제론(47.7%)에 기울어 있다. 다만 중도의 투표 의사가 낮은 게 변수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62.7%에 그친다(전체 73%). 20대도 절반(50.3%)만 적극 투표층이다.

대선 지지도 이낙연-황교안-이재명 순



안정론 대 견제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번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물었다. 전 국민 대상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6.1%로 압도적 1위였다. 2·3위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인데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13.2%인 데 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2.9%였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20~40대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 있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2.5%를 기록했다.

이념별로는 중도에선 이낙연(23.7%)-이재명(13.2%)-황교안(8.3%) 순으로 높았다. 진보도 비율만 다를 뿐 이낙연(47.9%)-이재명(18.7%)-박원순(3.4%) 순인 데 비해 보수에선 황교안(29.9%)-이낙연(7.7%)-이재명(7.0%) 순이었다.

고정에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27일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유선 비율 9.3%, 무선 비율 90.7%). 응답률은 22.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오차 보정 방법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 2020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셀 가중).

##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따라 스스로 보수·진보 규정하는 경우 많아”

스스로 중도라고 여기지만 정책 성향을 보면 중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 보수나 진보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율이 절반 정도다.

### 스스로 보수·진보라는 사람도 정책이념 따져보면 40%가 중도

중앙일보와 한국리서치의 ‘4·15 총선, 중도에 달렸다’ 공동 기획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 웹 서베이 조사 결과다. 이때 중도는 스스로 판단하는 이념이 아니라 남북관계·최저임금·부동산 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재분류한 ‘정책 이념’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 중도로 인식한 이들은 905명(전체 2044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인 51%가 정책 이념상으로도 중도였다. 하지만 26%는 보수로, 23%는 진보로 분류됐다.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509명 중에서 47%는 정책 이념상 보수였지만 40%는 중도, 13%는 진보로 판단됐다. 진보라고 응답한 603명 중 53%는 진보였지만 38%는 중도, 10%는 보수였다.

이런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했다. 개개인이 복합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 주의자가 되려면 그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목과 세계관을 갖춰야 한다”(『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는 요인도 있다.

그렇다면 주관적 이념을 잘 반영하는 질문이 있을까. 이번에 10개의 정책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선 검찰의 권한에 대한 판단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낳았던 ‘조국 정국’의 여파로 보인다. 그 다음이 대북 제재였다. 비정책 분야까지 넓히면 더 상관관계가 높은 질문이 나온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국정 운영 평가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는 둘수록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주관적 이념 평가가 연동되곤 한다”고 전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 중도·보수·진보 관계없이 “정치권 아빠찬스 NO”...기업 세습엔 의견 갈려

문화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 민주당 지역위 상임부위원장이 출마한다고 알렸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아빠 찬스’란 비판이 거셌다.

### 90% “훌륭한 지도자라도 독재 안돼”

결국 문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 한다”며 출마를 포기했다.

중앙일보와 한국리서치의 ‘4·15 총선, 중도에 달렸다’ 공동 기획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 웹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9.1%가 이 같은 ‘정치 세습’에 부정적이었다. ‘정책 이념’상 중도(86.6%)는 물론이고 진보(93.8%), 보수(88.2%)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절반 가까이는 아예 ‘정치 권력을 후대가 이어받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이 출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민심이다. 독재정치도 이념성향을 떠나 공감대가 있는 주제다. ‘훌륭한 지도자라도 독재정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또는 ‘어떤 경우라도 독재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진보·중도·보수 모두 90%를 넘나든다.

이념별로 입장차가 두드러진 분야도 적지 않다. 흔히 보수·진보를 나누는 예로 제시되곤 하는 ‘성장 대 분배’ 문제가 그렇다. 보수는 성장 쪽에, 진보는 분배를 강조한다. 중도는 그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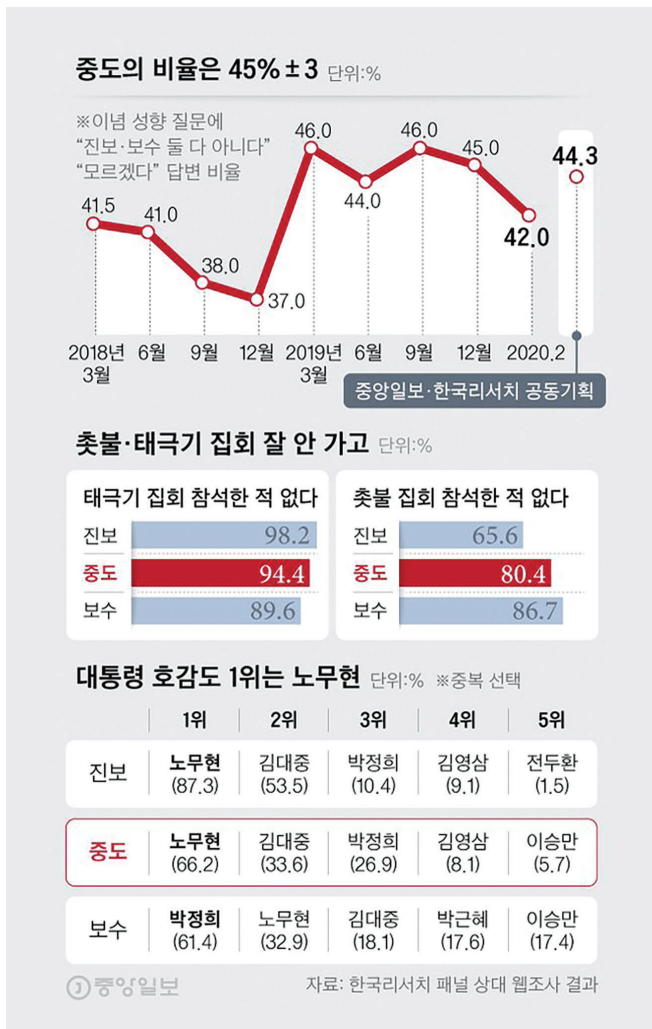
기업의 가족 세습을 두고도 보수에선 ‘괜찮다’(40.9%)는 입장이 우세하고, 중도와 진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48.8%, 58.3%)는 입장이 다수이나 진보에선 상대적으로 ‘세습을 허용해선 안 된다’(23.2%)는 목소리도 강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를 두곤 전체적으로 ‘강대국에 집중된 세계 권력은 점점 줄어야 한다’(67.1%)는 의견이었으나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도 괜찮다고 본다’는 답변이 보수(17.2%)에서 진보(3.1%), 중도(9.3%)에 비해 많았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 중도 94% “태극기집회 안 갔다” 80% “촛불집회 안 갔다”

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조사에서 중도의 51.6%는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지지·선호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진보(72.7%)가 보수(57.3%)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그런 점에서 4일 공개된 박근혜  
**중도 52% “지지하는 정당 없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이번 총선의 핵폭탄급 변수가  
**중도 34% 보수 10% 진보 73%**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도의 비율은 45%±3.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미지수다. 박종선 한국리서치 이사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수의 지지를 강화하고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통계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지 그룹은 충성도가 높아 기존의 보수적 의견에 대체로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지·호감 정당이 없는 51.6% 중도 유권자의 총선 관심이 더 높아졌을 때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인 마스터 샘플을 활용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44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속내를 파악하기 힘든 중도는 어떤 정치적 패턴을 보였을까. 촛불 집회나 태극기집회 참여 횟수를 물었더니 “참석한 적 없다”고 답한 중도는 각각 80.4%, 94.4%로 조사됐다. ‘갈라진 광장’으로 불리는 갈등의 현장에 중도 10명 중 8, 9명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참석한 적 없다는 답변은 촛불집회 77.7%, 태극기 집회 94.3%로 높게 나타났다. 촛불집회 참석 경험이 없는 진보는 65.6%, 태극기 집회 참석 경험이 없는 보수는 89.6%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 (63.6%)를 차지했다. 김대중(35.4%), 박정희(31.2%)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복수 답변을 받은 결과다. 중도는 노무현(66.2%)-김대중(33.6%)-박정희(26.9%) 순으로 선호율이 높았다. 진보는 노무현(87.3%)-김대중(53.5%)-박정희(10.4%), 보수는 박정희 (61.4%)-노무현(32.9%)-김대중(18.1%) 순이었다. 싫어하는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전체 61.7%)이 진보·중도·보수 모두에서 1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39.1%였고, 중도는 34.2%였다. 진보는 72.9%, 보수는 9.6%의 호감도를 나타냈다.

이번 분석에서 쓰인 진보·중도·보수의 이념 성향은 1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7점 척도(1, 3, 4, 5, 7점)로 점수를 줘서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분류된 중도는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부동산 가격에서 진보 입장과 다소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보유세와 상속세, 대북제재, 교육 정책에서는 보수와 비슷했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shyun@joongang.co.kr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인 마스터샘플(2020년 2월 현재 약 46만 명)을 활용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44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다.



## [outlook] 국민 45%는 중도... 보수·진보만 있다는 착각서 벗어나라



노익상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 중간쯤 된다” 혹은 “보수나 진보라는 단어로 편을 가르지 말아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중도’라 부른다. 그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40~45%(한국리서치와 한국갤럽의 지난 2개년 조사 결과)다.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중도는 보수(25% 내외)나 진보(30% 내외) 비율보다 확실히 더 많다.

### 노익상 한국리서치 회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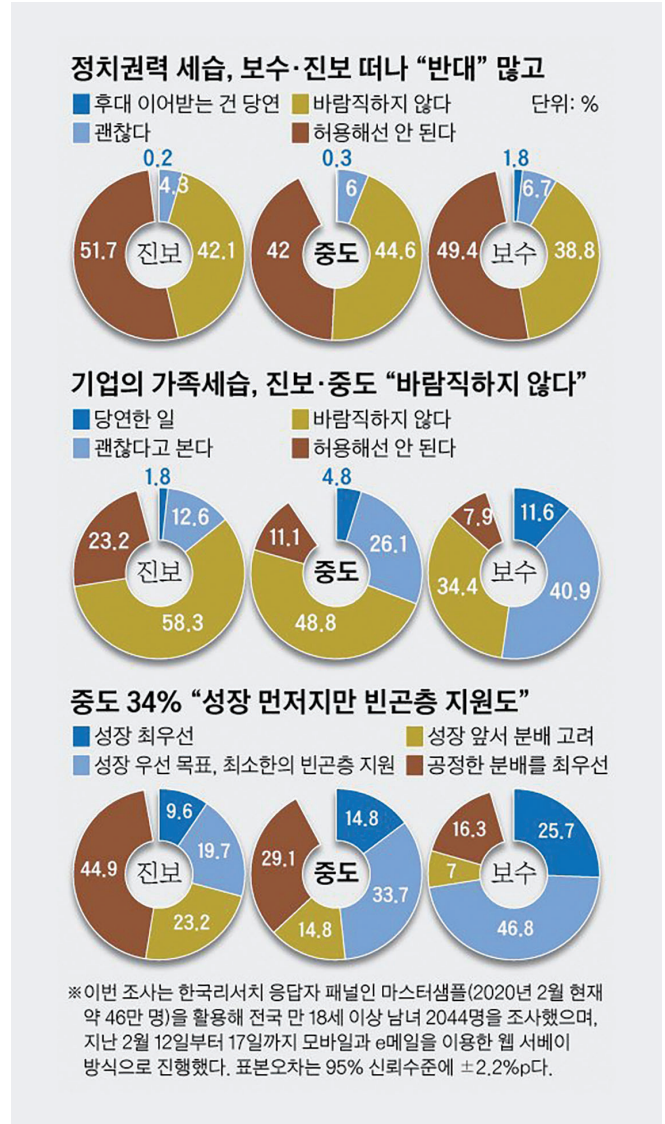
#### 2030·주부 중심...“원칙보단 실용”

#### 재산·교육 문제선 자유경쟁 지지

#### 사회적 약자엔 복지 정책 중시

이 중도층은 누구일까? 모든 지역에서 중도는 보수나 진보보다 많다(호남 지역에선 진보가 51%로 더 많음). 남자보다 여자 중에서(중도 48%), 18~34세의 젊은층에서(52%), 가정주부(48%) 중에서 중도가 조금 더 많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성·연령·직업·소득·재산·계층에서 중도층은 보수나 진보에 비해 다수를 차지한다. 중도는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중도의 태도는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을까? 교육 정책에서는 평등교육보다 자유경쟁 지향 쪽으로, 남북 관계 중 북한 제재 면에선 완화보다 유지 쪽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정책에서는 현재보다 더 과도한 부과에 반대하는 경향이다. 중도층은 재산과 교육 등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면에서는 자유경쟁 쪽을, 사회적인 정책에서는 복지 중시의 경향을 띠고 있다. 중도의 사회·정치 사상은 무엇일까? ‘평등 지향 사회’(22%)보다 ‘자유경쟁 사회’가 더 바람직하며(73%), ‘기도나 기원의 힘을 믿는 편’(62%)이고, ‘전통과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56%)고 생각한다. 반면에 ‘정치가의 지역구 혹은 권력 세습’에는 반대(87%)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독재정치는 용납할 수 없다’(83%)는 생각이며, ‘빈부 격차를 당연시하기보다 가급적 줄여야 한다’(80%)고 주장한다. ‘기업의 가족 세습에는 반대’(60%)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렇다면 중도는 보수나 진보에 비해 혹시 더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더 실용적이거나 더 인간애적일까? 이번 중앙일보·한국리서치의 공동 기획 ‘4·15 총선, 중도에 달렸다’의 조사에서는 보수·중도·진보의 가치관을 북유럽 사회학자인 한스 제터버그의 가치관 이론을 원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안정 지향-변화 지향’의 면에서 중도는 그야말로 중도다. 안정과 변화 중 어느 한쪽을 주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원칙이 더 중요하나, 실용이 더 중요하냐’의 가치관에선 실용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다. ‘성과 위주의 물질주의 쪽인가? 혹은 과정 위주의 사람 중심 쪽인가?’의 사고에서는 조금 더 성과 위주 쪽이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다수(40~45%)를 차지하는 중도는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포돼 있으나 특히 정치에는 관심이 적고 가정 살림과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가정주부, 사상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 중심이며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대학생과 20~30대의 젊은층이 그 주된 흐름이다. 이제 우리 정치는 보수냐 진보냐의 이분법적 착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주의적 이면서 실용 위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이 옳다는 중도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아끼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노익상 한국리서치 회장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응답자 패널인 마스터샘플(2020년 2월 현재 약 46만 명)을 활용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44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모바일과 이메일을 이용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pm 2.2\%$ 다.



